



## 한국서부발전



수신자 본사전처실 및 전 사업소(전 처, 실장 및 전 사업소장)  
(경유)

제 목 반부패·청렴 예보(제2022-3호)

1. 최근 ○○기관 소속 직원이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예보」를 안내 하오니 공직자의 윤리관에 기초한 투명한 업무 수행과 관리·감독 철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감사위원 반부패·청렴 예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므로 전 직원은 불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유형 :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 제2조제4호의 가목 :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 제2조제4호의 나목 : 공금 횡령·유용,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 사기
- 상기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3. 부패행위 상담 및 신고 방법

- 사외 홈페이지 : 익명신고(레드취슬), 반부패·청렴센터
- 사내 홈페이지 : 윤리인권 → 상담·신고센터

붙임 1.부패공직자의 판단기준 1부. 끝.

2.언론보도 1부. 끝.

공공감사연번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실장

수신자

---

차장	이성훈	부장	오승환	실장	한만권
----	-----	----	-----	----	-----

시행	감사(감찰)-56553 (2022.08.01)	접수
주소	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홈페이지 <a href="http://www.iwest.co.kr">www.iwest.co.kr</a>
전화	1132 FAX	이메일 <a href="mailto:plan1@iwest.co.kr">plan1@iwest.co.kr</a>
사내접근	전체공개 알리오공시 비대상	원문공개 부분공개

## □ 부패행위 개념

### 【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① '가'목에 따른 부패행위 판단 기준

- 직무와 관련하여 :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를 포함

※ 뇌물죄에 관한 판례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확대 해석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임.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등)

-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 이익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산, 비재산,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포함하나 반사적 이익은 제외

※ 부패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다르므로 형사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패행위로 징계 등 처벌 가능

### <부패유형별 예시>

부패유형	사례 (예시)
증 · 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검사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li> <li>▪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처분 경감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li> </ul>
향응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의 업무 편의를 봐주고 성접대, 골프 접대를 받은 행위</li> </ul>
공금 횡령 · 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여 예산으로 지급 후 업체로부터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li> </ul>
직권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허가를 하도록 소속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건축허가 통지토록 한 행위</li> <li>▪ 용역업체에 계약과 무관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li> </ul>
직무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용도변경을 단속하면서 지인의 불법 용도변경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행위</li> </ul>
비밀누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단속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는 자에게 사전에 누설하는 행위</li> </ul>
문서 위 · 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진순위를 조작하여 허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행위</li> </ul>

## ② ‘나’목에 따른 부패행위 판단 기준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

### <부패유형별 예시>

부패유형	사례 (예시)
공금 횡령 · 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외 수입 등을 횡령하는 행위</li> <li>▪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이 중 일부를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행위</li> </ul>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행위</li> <li>▪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행위</li> <li>▪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을 명시하여 특정업체가 고가로 낙찰되도록 한 행위</li> <li>▪ 지체상금 ·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li> </ul>
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수를 허위로 늘려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li> </ul>

# 원희룡 장관, 직원 뇌물수수에 휴가 중단 "공직 부정부패, 발본색원"

발행일: 2022-07-27 17:48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과장, 뇌물 수수 혐의 구속  
공공기관 혁신안 주문했는데, 국토부서 부패 사건  
강도높은 전수조사, 신고시스템 재정립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국토관리청장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공직 부정부패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직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휴가를 중단하고 부정부패 카르텔 청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원 장관은 27일 경남 김해시 진영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고 국토관리청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소속 과장이 공사업체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15일 창원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원 장관은 이 사건을 보고 받고 “공직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원 장관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혁신안까지 퇴짜를 놓을 정도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다. 민관 TF를 꾸려 혁신안 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국토부 직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자 휴가 중 복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에 앞서 우리부터 부패와 기득권 카르텔을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강도 높은 전수조사와 신고시스템을 재정립할 것”을 지시했다.

공직자가 업체와 유착하거나 퇴직자와의 연결을 통한 카르텔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의 신고·제보시스템 활성화하라는 내용이다.

원 장관은 “LH 투기사태 이후 진행된 감사원 결과 발표에 연루된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일할 자격이 없다”며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22. 8. 1. 오전 8:55

원희룡 장관, 직원 뇌물수수에 휴가 중단 "공직 부정부패, 발본색원" - 전자신문

하며, 국토부와 LH는 감사에 준하는 수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

Copyright © Electronic Times Internet. All Rights Reserved